

未來社會의 전망과 大學教育體制의 변화

具 丙 林
(本 協議會 事務總長)

앞으로 각국은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국민 교육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특히 국제경쟁력의 주역이 될 인적 자원을 위해 고등교육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의 안주에서 벗어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未來는 스스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創造되어야 한다.”는 命題는 進向적인 現代인들의 歷史觀으로 일반化되고 있다. 變혁과 격동 속에서 저물어가는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世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세계정세나 국내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비하는 대책과 戰略에 대한 論難이 두성하다.

이에 우리나라 大學教育體制의 토양이나 그 배경이 될 國內外 情勢의 變化를 豫斷해 보고 이에 상응하는 大學教育의 變化 趨勢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1. 競爭과 마찰, 그리고 그 克服을 위한 國際關係

① 앞으로의 세계는 國際연합(UN)을 중심으

로 하는 지구촌 시대(globalization)라는 국제화 조류와는 별도로 정치·경제·산업·기술 면에서 의 圈域化(EC, NAFTA, APEC 등)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 제나 전범국가 또는 민족의 국제적 책임이 稀釋 되면서 일부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한 신민족주의 의 대두로 세계질서의 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이로 인하여 각국과 각 지역간에 경제·산업기술·환경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과 마찰 및 상호견제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간의 새로운 상충적 대립과 갈등은 필경 경제, 산업이나 자원전쟁의 양상으로 진전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지향적 수준의 나라에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③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의 양극화는 이미 봉

괴되었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새로운 多極化가 진전되고 있다. 이로 인한 긴장과 대립이 국가간·지역간의 상충관계를 갈수록 심화시켜 그동안의 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국제적 이상이나 UN헌장의 이념 등이 많은 도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④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그동안 자유세계와 단결되었던 동구권 및 중국 등이 국제질서의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경제적 교류와 경쟁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제적·관도를 형성해 갈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에서의 발전 의지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열기는 자유세계에 대한 직·간접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⑤ 정신적으로는 과학기술과 경제 위주의 물질 문명 속에서 파괴된 자연과 환경의 보호 및 상실된 인간본성이나 윤리의식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운동이나 학·예술 활동 및 정신문화적 氣風이 확산될 것이다.

⑥ 첨단과학이나 정보산업이 더욱 발전되고 일반화되면서 緩急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적으로 과학문명의 새로운 혁명이 진전될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나 생활 便益이 더욱더 보장되는 반면, 인간의 疎外와 困蹙的 사고체제의 큰 변화로 인한 갖가지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⑦ 위와 같은 대립과 긴장, 경쟁과 마찰, 상충과 도전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를 統禦하는 갖가지 機制와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 교육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국제경쟁력의 주역이 될 인적 자원을 위해 고등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다.

2. 民主化와 經濟 再跳躍을 위한

國內的 課題

① 6·29선언 후 추진되어 온 각 분야의 민주화·자율화가 더욱 촉진되어 종래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나 規制 중심의 행정이 크게 緩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각계각층의 주장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증

幅될 수도 있으나,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順機能으로 정착될 것이다.

②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경제교류 및 合作기업과 相補的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분위기가 성숙되어 갈 전망이다. 따라서 통일 후를 대비하는 각종 대책과 준비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갖가지 교육문제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70, '80년대의 고도성장이나 '88년 올림픽에 따른 '거품경제' 및 '성급한 삼폐인'으로 인한 衝動的 소비풍조가 진정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나 반성적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갖가지 대책과 전략이 제기되면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④ 그러나 날로 가열되는 경제적 경쟁이나 무역마찰 및 기술장벽으로 그동안의 성장 추세가 鈍化되고 호혜적 협력관계가 多邊化되면서 정치적으로는 全方位 외교가 정착될 것이다. 특히 중국 등 경제후발국들의 追躰이나 고임금현상 등으로 산업 면에서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⑤ 사회적으로는 평등의식이나 기본권에 관한 관념이 일반화되고, 민주적 세 질서가 정착되면서 빈부간의 격차는 완화되고 사회복지와 인권신장이 특히 강조됨으로써 선진국에 접근해 가는 변화가 예상된다.

⑥ 학·예술 분야의 발전과 성장으로 외래도 방문화의 반성과 함께 창조적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이 국가발전의 기초를 이루게 될 것이며 比較優位的 산업이나 특성 있는 문화의 추구에 역점을 들 것으로 전망된다.

⑦ 평생교육체제가 계속 확충되면서 전 사회의 教育場化와 각급학교에서의 사회교육적 기능이 확충될 것이다. 또 전 국민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도 정신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과 특히 도덕, 윤리, 사회규범 등이 강조되어 소위 '한국적 병리현상'의 치유를 위한 갖가지 사회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⑧ "不況이나 취업난은 교육 需要를 더욱 刺戟한다."라는 逆理에 따라 교육수요, 특히 고등교

육에 관한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다양화·개방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大學教育體制의變化에 관한展望

위와 같은 국제정세 및 경제력 증진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아울러 국내의 사회적 변화 전망은 대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충격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간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양면성 속에서도 국력의 신장과 기술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각국은 고등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기술이나 수준 높은 인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국제경쟁 속에서는 각국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대학은 이제 '국가발전의 원천'이라는 본래적 사명에 보다 밀도 높은 궤적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오늘날과 같은 방만한 조직, 획일화된 교육체제 그리고 느슨한 교학질서 속에 방치되지 않을 것이며, 슬한 대내외의 압력이나 도전 속에서 많은 시련과 개혁을 겪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사회적 혼란이나 충격 속에서 한국의 대학들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사실 이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에서 벗어난 외부적 마찰이 波及된 것으로 상당한 부분을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轉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발전이나 사회적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룩한 미래사회에서 이제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책무성에 대한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顧客(client)인 학생들로부터 많은 주문과 요구가 繼到하게 될 것이다. 정부나 기업 및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점차 호전되어 갈 전망과 함께 그 책무성이나 생산성에 대한 평가와 비판 그리고 질타를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급속히 발전하는 학문과 직업세계의 변화, 사회적인 압력과 기대의 상승 및 대학 자체의 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적인 과제가 대학사회에 賦課되고 있다. 이제 대학들은 그동안의 '孤

獨과 自由' 또는 '象牙塔의 安住'에서 벗어나 큰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나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관하여 전망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教育民主化와 大學自律性의 신장과 정착

반세기 미만의 우리나라 대학사에서 대학교육이 그동안 많은 規制와 啓蒙的 행정체제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의 撥雨傘 아래에서 안주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와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 등으로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리면서 창의적 발전과 자율적 성장을 해야 하는 대학이 획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일부 자율역량이 있는 대학의 경우 발전에 큰 장애와 제약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의 민주화가 강조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당분간 이로 인한 마찰이나 갈등이 다소는 있다 하더라도 인내의 관용으로 지속될 때 모든 대학들은 이를 정착시켜 바람직한 대학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至高한 전통이며, 지금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람직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주화나 자율이 無律과 放縱은 아닌 것이며, 고도의 책무성과 수준높은 自己統制의 防壁이므로 이를 위한 자결과 역량이 전제된다.

'90년대에는 그동안의 誤導된 [자율화나 성급한] 개혁들이 [스스로 조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교육민주화나 대학의 자율이 바람직하게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支援·助成을 위한 대혁신정책으로의 전환

대학의 자율적 경쟁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원칙적으로 찬동하지만 여건의 [성숙이나] 경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엄청난 폐단과 逆機能이

있음을 看過하고 있다고 본다. 오랜 세월 획일 통제의 굴레에서 거의 자율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가 시대적 조류에 밀려 교육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화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실상이나 교육의 여건을 자율적 경쟁으로 방치하기에는 그 先行條件들이 전혀 신속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경쟁은 어느 정도의 기반 구축이나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것이지, 성장 과정의 보호나 지원·육성 없이 바로 경쟁 속으로 放棄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나 풍토 그리고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육성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대학발전의 機制가 되고 있는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留保하자는 뜻은 아니다. 당분간 일반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서서히 경쟁적 성장을 유도하는 兩面 정책이 아쉬운 것이다.

따라서 규제와 감독 등 소극적 대학정책이 이제는 보호와 육성 및 助長의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공감하면서 이는 미래의 대학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징벌이나 행·재정적 조치 등은 더욱 강화됨으로써 모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3) 大學教育體制의 다양화·실질화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규격화·획일화 및 硬直化의 因襲에서 벗어나면서 모든 분야가 다양화·실질화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실 '대학평준화'라는 용어나 좁은 의미의 '수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모든 대학들의 '일류대학의 꿈'은 실현될 수 없는 虛構이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직업세계가 분화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학들도 그 수요와 기대에 맞춰 자기 正當性을 확립하고 다양한 모델, 여러 계층의 대학체계가 자리잡아 가야 한다. 규모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의 소규모

대학(miniversity), 지역중심대학(communiversity), 중규모대학(iniversity), 대규모대학(multiversity) 그리고 국제성을 띤 초국가적대학(globesity)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쯤은 파리대학이나 런던대학 또는 캘리포니아대학이나 하버드대학과 같은 범세계적인 대학이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원과 연계되는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및 직업지향 대학 등의 특성과 교육체제가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학들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사회적 수요를 가치롭게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며, 그 존재 가치에 優劣을 가리려는 階序的의식은 금물이다. 이제 모든 대학들은 그 프로그램과 교육체제를 고각인 학생들의 회구와 요망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교육기회의 普適化·開放化가 불가피

민주국가, 복지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고등교육기회나 대학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유도할 수는 있되 이를 制止할 수는 없다. 이미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열 속에서 정원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視角과 論難이 있다.

외국과 같이 대학지원자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지원자가 낙방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당분간 입학정원의 증원과 개방적 교육체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에 제기될 학사운영의 融通性·柔軟性을 살려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終局教育(terminal education)이라는 비인간적 개념을 배제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대학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0년까지 동연령 인구집단의 50% 수준까지 대학인구가 확대될 전망이며, 수확연한의 조정이나 일반대학과 개방교육체제의 연계 등을 통한 경직성의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定員관리와 學事운영상의 경직성 배제

대학의 입학정원이나 학위등록제 등은 규제적

대학정책의 象徴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장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화정책이나 대학의 자기통제라는 견지에서 이는 필요악이며, 특히 학위등록제는 정부의 대학 불신과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이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면적 폐지에 따른 폐단이나 일부 부작용 등은 적정한 행정지도나 감독 그리고 대학평가제도 또는 勸告 등을 통하여 능히 통제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편입 제도에 대한 규제나 대학원의 정원규제, 복학, 재입학 등 모든 학사운영에 있어서의 획일적인 금지와 제약 등이 대폭 해소되고 점진적으로 각 대학에 일임되어 각 대학이 그 대학의 사회적 신뢰나 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그리고 대내적인 自己統制의 範圍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6) 教育條件 改善을 위한 자구노력의 활성화와 외부지원제도의 정착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체제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정부 시책과 의무교육의 확충 및 보통교육 위주의 투자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예산 중 교육투자의 비율이 국민 총소득의 3.5%에 불과하며, 교육비 중 고등교육비의 비중은 6.7%에 불과하다(학생인구는 17% 수준).

따라서 총운영비의 60%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재정구조도 취약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공납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교육과정연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90년도부터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나 융자제도가 시작되고 국립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대학사회는 점차적으로 외부의 지원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공납금이나 명

목법인 법인이나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갖가지 모금이나 산업체의 지원 유도, 재정운용의 합리화 등 자구적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90년대에는 대학에 대한 외부지원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각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그동안의 재정난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어 교육의 양보다 질적 수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교육의 질과 대학운영의 생산성 보장을 위한 大學評價制度 정착

대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국제경쟁력 확보의 苗床이 될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운영체제의 합리화는 더욱 강조되어 마땅하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그 體制分析的 接近을 통해 운영 합리화와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각 대학의自省과 교육개혁을 위한 의지 속에서 실현될 수 있고, 二元的인 대학평가체제(학과별 평가, 대학종합평가)나 교수평정제도 등을 통해 이를 점검·촉진해 가는 과정과 질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대학운영의 합리성을 위한 대학사회의 自己統制를 위한 機制로 평가제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産·學·研·官의 협력과 大學間 協동 강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하나의 병폐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각 기관간의 협력 부족에 있다는 중론이다. 대학교육은 그 기능인 교육과 연구 및 봉사에 있어서 산업계나 연구소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직 그 협력이나 연계체제가 미약한 입장에 있다.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개발이나 유용한 고급인력의 輩出이라는 책무를 안고 있는 대학은 이제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과 국책 및 기업연구소와 연구협

력 및 이를 統整·支援해야 하는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간의 기술장벽이나 무역마찰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시대라는 변화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간의 경쟁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교류하며 경비를 절

감할 수 있는 대학간 협동 역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자기 특성이나 비교우위적 장점을 살리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弊端을 배제하면서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그 생산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려는 선진국 모형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投稿案内〉

『大學教育』 제64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외국의 연구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7장 또는 8장, 80칼럼에 줄 간격은 14(더블스페이스)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4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 ① 우)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